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소비자 혼란 가중

정부, KC미인증 원천차단 예고
반발 거세자 사과...사실상 철회
“금지 아닌 위해성 조사 차원”
“오락가락 정부 방침 혼돈” 지적

정부가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해외 물품 직구(직접구매) 금지 논란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아동·생활용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데 대해 소비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을 차단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해당 조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을 받기 전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



정부가 KC미인증 물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원천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흘째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19일 브리핑을 열어 해당 조치를 사실상 철회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의 모습.

뉴시스

에 대해서도 신고·승인을 의무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세게 일자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린이

제품·전기제품 등 80개 품목에 대한 ‘KC 인증’ 획득 전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최초 발표에 충분한 설명이 부연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80개 위해품목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80개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이건 구입하시면 안 되니 차단하겠습니다’ 작업을 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80개 품목, 위험할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초과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차단 조치를 하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80개 품목에 속하는 제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실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해 차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KC미인증 시 직구 원천차단 논란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

애기가 아니다”며 “어린이 학습용품 종류가 수천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된다.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애기가 아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모든 품목에 대해 법률을 다 해서 사전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법안 개정 조치 예고 이후 X(구 트위터) 등 각종 온라인 취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반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만화 캐릭터 인형 등 각종 굿즈를 구매하는 한 소비자는 게시물을 통해 “해외에서 1만~2만원하는 것이 국내에 들어오기만 하면 4만~5만원은 족히 넘는다. 같은 물건인데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사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조치 발표 이후 계속해서 정부의 말이 달라지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은행, 무더위쉼터 127개 전영업점 운영

9월30일까지 생수·부채 제공
2018년 은행권 최초 시행 호응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0일부터 9월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27개 전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무더위쉼터를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서 운영해 노년층 및 폭염취약계층 등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내(오전 9시~오후 4시)에 운영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며, 부채는 6월중 제작 및 배포 예정이다.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2018년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 후 매년 운영해오고 있다. 매년 여름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해 시원한 생수를, 겨울에는 한겨울쉼터를 운영해 휴대용 핫팩을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으며, 은행 거래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함으로써 고객과 지역민의 호평을 얻으며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성숙 광주은행 영업기획부장은 “지역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개방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가 지역민과 고객님께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민의 더 나은 삶, 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제 1120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2 19 26 31 38 41	3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25억2216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5081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51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경총, ‘청년 직장 적응 프로그램’ 운영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선정
6월14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 지원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올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성장프로젝트 직장 적응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3월 1차 사업에 이어 20일부터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9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직장 적응 프로그램’은 입사 초기 청년의 장기 재직을 위해 직장 내 청년친화조직문화 조성 및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은 지역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최고경영자(CEO), 중간관리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리더혁신 등 교육을 실시하

고, 직장 적응 지원을 위해 지역 기업에 입사한 청년 신입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교육, 직장 예절, 팀협업 및 기본 오피스 교육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소 지역 기업에서 겪고 있는 우수 인재 확보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직장 적응 프로그램으로 조직 적응 도모 및 애사심 향상, 기업 생산성 증대 등 일자리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기업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년친화 리더혁신 교육을 통해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을 기르고 노사간의 상생과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경총은 20일부터 6월14일까지 광주지역 소재 우선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친화조직문화개선(관리자)’ 및 ‘직

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신입직원)’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기업에서 희망하는 교육을 선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 자사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gjef.or.kr) 또는 총괄사업본부(062-654-34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지역 대표 경제단체로서 기업에서 겪고 있는 여러 일자리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정부와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고용정책 제안과 사업을 확장하겠다”며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의 청년 친화 조직문화 조성 및 신입직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일자리 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권범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

금감원 Q&A

정기예금은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회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하는데, 보험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알릴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민원의 8.5% 수준(2023년 기준)이다.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의무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

문 김○○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가지 중 고지혈증 진

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중요한 사항(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사항-대법원 96다 27971)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병력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모두 기재해야 한다.

문 이○○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 는 소견을 받았으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청약시 질병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처리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의사의 소견도 알릴의무 대상에 해당돼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를 수령한 경우 검진 결과(종합소견) 내용을 숙독한 후 보험가

입 청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알릴의무 질문사항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결과가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중요성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재한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사가 진찰한 결과가 기재돼 있는 이상 이를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보아야 하며 알릴의무 대상이다(서울중앙지법 2018나12765 판결)

문 최○○은 보험가입 직전 간경화증(간경변)을 진단받았으나, 청약시 5년 이내의 10대 질병(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방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인한 투약, 진단 여부 질문 등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했다. 보험 가입

후 간암을 진단받았으나, 간경화증 병력을 미고지한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 부지급 및 계약 해지 됐다.

답 금융감독원은 청약서에 명시적으로 묻고 있는 10대 질병 진단 및 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 보험(유병력자 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알릴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 1332